정책제언

'농촌 빈집 활용방안' 시급하다

정 석 윤 |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골칫거리인 빈집이 농어촌은 물론 중소도시까지 늘어나 전국 주택의 8%에 해당하는 151만 채에 달한다. 게다가 빈집 네 채 가운데 한 채는 1년 이상 빈 채로 방치돼 있고 상대적으로 전남, 제주, 강원, 영남 등 농촌지역에서 빈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증가하는 농촌지역의 빈집은 지역 경관을 훼손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빈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관·공이 협력해 농촌지역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지주택연구원의 논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주택 1852만 채 가운데 빈집은 8.2%에 해당하는 151만1300여 채다. 5년 전인 2015년(106만9000채)과 비교하면 무려 41.4% 늘어난 물량으로 특히 농어촌 지역의 슬림화가 심각함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지역별 빈집 비중을 보면 전남이 15.2%로 가장 높았다. 또, 전남의 빈집 가운데 42%가 1년 이상 빈집이었다. 뒤를 이어 제주가 14.2%였으며, 강원(13.1%) 전북(12.9%) 경북(12.8%) 충남(12.3%) 충북(12.0%) 경남(11.6%)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인 경기를 제외한 전국 나머지 도 지역이 모두 두 자릿수의 빈집 비율을 기록한 것이다.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해당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고, 사회적인 평판을 떨어뜨림은 물론, 토지와 같은 제한적인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문제다. 또 과거 석면 재질의 슬레이트 구조 빈집이 방치돼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슬레이트 빈집 철거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결책으로 우선 재활용 가능한 빈집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귀촌인에게 빌려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비용 지원도 좋은 해법일 것이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한 이후 세금계산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농지로 활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부도 빈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과 일부 도시지역에서 빈집이 크게 늘어 정비 요구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고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기금 예산 지원 방안을 통해 빈집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대책도 이미 제시했다.

귀농·귀촌인이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조성하거나 마을 안에 있는 남은 공간 또한 방문객들이 쉬면서 놀다 갈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든다면 농촌지역의 빈집들은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의 빈집 문제는 인구 구성, 일자리와 복지,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촌지역 지자체는 비어 있는 집에 대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해 벗어나고 싶은 농촌에서 다시 살고 싶은 고향 농촌으로 전환하는 턴어라운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필자는 기대한다.

출처:한경 오피니언 _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73 | Fax. 033-249-5274
Copyright(c)2022 강원도의회 All rights reserved.

정부동향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정책 패러다임, '재취업 지원 → 경력단절 예방'으로 확장

□ **여성가족부는 5월 31일(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법 시행 13년 만에 전면개정한 것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여성경제활동법은 정책 대상과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대폭 확대하고,

-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 · 임신 · 출산 · 육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던 이전과 달리,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경력단절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하였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는 개정 방향에 맞춰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업무를 강화하였다.

○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백서 발간, 구인 · 구직 정보수집 · 제공 등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법 전부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정비하며,

○ 확대된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2008년 경단법 제정 이후 경력단절여성 규모 축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취업자 수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 특히 지난해에는 장기간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자신감 저하, 일 · 가정 양립 문제로 적극적 구직활동이 어려운 64만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구직준비 단계부터 고용유지까지 맞춤 · 통합형 취업지원,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 중 18만여 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 아울러, 740여 개의 다양한 신기술 · 고부가가치 등 미래직종분야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부처 전문인력 양성-여가부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경단여성의 일경험과 정규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인력양성-일경험-고용유지를 통한 선순환 구조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거, 교통 등 민생 최전선에서 물가안정 앞장선다

- 1차관 주재「국토교통 물가안정 T/F」구성·운영 추진 -

□ **국토교통부는 6월 2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주거비, 교통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하며 민생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의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를 구성하였다.

○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며,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 특히,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우려에 대해서는 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②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하여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금일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매주「 국토교통 물가 T/F 」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물가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최중증에 대해 학계, 현장 등에서 별도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일상생활·의사소통 지원 필요, 도전적 행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평가

□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돌봄 부담을 해소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전문적·통합적(통합돌봄서비스)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 지역사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강원도의회 정책 Letter
vol.62
2022. 06

정책브리프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방의회 발전과의 연계 분석

김 건 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1. 국정과제와 공약

1) 110대 국정과제

• **의의**

- 2022년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음
- 거기에는 국정 목표와 국가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며,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음
- 이번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활동을 통해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할 수 있음
  - ▶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국정목표 5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19. 자유민주적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트리 형태의 체계

- 비전과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 그리고 원칙에 입각한 비전 달성을 위한 개개의 국정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는 일종의 트리 형태를 띠면서 연계성을 갖고 있음
- 일종의 목표-수단 관계를 갖는데, 우선은 비전(목표)-국정목표(수단)의 관계를 가지며, 이는 다시 국정목표(목표)-국정과제(수단)의 연쇄관계를 갖게 됨
-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는데,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하였음
- 추가된 미래, 지방시대의 국정목표는 미래지향성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역과 관련된 공약 추출

-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관은 행안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음

국정목표 1-3 :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3-11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기부, 행안부, 개인정보위)
1-3-12 :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국조실, 행안부)
1-3-13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행안부, 권익위, 법제처)

국정목표 3-12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3-12-65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행안부, 소방청)

국정목표 3-13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3-13-70 :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농식품부, 행안부)

국정목표 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별도) 15대 국정과제-76개 실천과제 (4.27 지역균형발전특위 발표)
(별도) 균형발전 지역공약 :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 (4.27)

2) 지역균형발전 비전 : 국정목표 6의 국정과제-실천과제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도약'을 강조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기회발전특구'신설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15개 국정과제를 4월 27일 발표
- 약속①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약속②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약속③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약속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76개 실천과제를 제시
- 또한 17개 지역에서 상기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분권·지방 재정권 강화, 지자체 자기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형 국책사업 신속 추진 등의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개 정책과제도 제시

3) 지방의회 관련 과제 추출

-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먼저 지방의회 및 지자체와 관련된 중앙부처인 행안부 관련 과제를 추출하였고, 다음으로는 국정목표 6에 속하는 지역균형특위 과제 가운데 지방의회 관련 과제를 추출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110개 국정과제

국정목표 1-3-11~13 ← 지역(행안부) 관련
국정목표 3-12-65, 3-13-70 ← 지역(행안부) 관련
국정목표 6-1~15(76) ---------- (지방의회) 6-1-3~4 ; 6-6-1~3

- 지역(행안부) 관련된 과제는(디지털플랫폼, 소통, 유연한 체계 등) 국정목표 6-1~15의 내용과도 적정 매칭된다고 할 수 있음
  - 공통적으로 지방의회 및 지자체와 관련된 국정과제의 목표이거나 수단일 수 있음(디지털플랫폼, 소통, 유연한 체계 등)

• [그림 2] 15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국정과제		실천과제 (76개)	
①	지방분권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 • 지방분권 사전평가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 • 자치경찰권 강화
		• 특별자치시·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제주·강원·세종)	
②	지방재정력 강화	• 지방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 설정 •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진단	• 지방 자주재원 확충 •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 개선
③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 • 지역대학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지역대학까지 확대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④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능 확대 •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경쟁 촉진	•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 중복감사와 직무감사 개선으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	•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의 설치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개선	• 분권혁신특구의 조성 •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자체간 협력 활성화
⑥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 주민투표제도의 개선 • 지방감사제도의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 및 역할 확대
⑦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 조세 및 규제특례지역("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가칭)") 지정 및 운영 •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⑧	공공기관 지방 이전	• 공공기관 추가 이전 •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 기능 강화
⑨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농어촌 청년뉴타운 조성 • 쾌적한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 농산어촌 생활인프라 구축 • 이웃사촌 돌봄 주민운동	• 기술자본집약형 스마트팜 혁신 클러스터 조성 • 농촌소득원개발특별지구 조성 • 산촌, 어촌의 특화사업 확대
⑩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및 항공물류 산업화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신항만 건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⑪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 지방대학 기반 「혁신 캠퍼스 타운」 조성 • 지역기업 글로벌 혁신성장생태계 조성 •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 지역금융 지원체제 강화	• 혁신융합캠퍼스(산학융합지구) 활성화 •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및 지역투자 플랫폼 구축 • 개별 지역기업 밀착-원스톱 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⑫	신성장 산업의권역별 육성 지원	• 지역주도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글로벌 신산업·혁신특구 지정 및 육성 • 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⑬	지역사회의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 양성 •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 인프라 구축	• 로컬 브랜딩, 골목상권 육성 및 산업화 촉진 • 동네·마을 로컬 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책연계 강화
		• 중앙-지역 정책연계 투자협약제도 유연성 확보	
		•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생태계 구축	
⑭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 지역의 '기초 사회·문화 인프라' 개념 정립 및 강화 • 지역특화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 각 지역 고유의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 및 활력 제고
		• 지역 공동체 인프라 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촉진	
⑮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	•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으로 시너지 제고	
		• 지역공약 이행률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지표 재편해 지속적 관리	
		• 지역공약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마련해 실천 동력 확보	
		• 공약사업 중심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 지역정책 체감도 제고	

2. 지방의회 관련 공약 내용

1) ③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신규】 (6-1-3)

- 지역 특성에 맞도록 기관구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2) ④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신규】 (6-1-4)

- 지방의회의 조직·인사 자율권 확보로 지방의정 역량 강화
- 주민참여와 정보공표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 확보

3) 6-6-1~3

- **①주민투표제도의 개선【신규】**

-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한 주민직접참여 방안을 도입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통제 실현
-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지자체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주민이 표결하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이 지방행정을 통제하기 곤란
-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의 대상과 요건에 대한 장벽 완화
  - 재정에 대한 주민투표 및 주민발안 도입으로 지방재정에 관한 주민의 직접 통제 및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 최소투표율을 완화하여 사실상 공개투표의 위험과 관권에 의한 주민의사 왜곡 방지

- **②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 및 역할 확대【신규】**

-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과 지방행정 통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지방의회 일당 지배구조로 인한 폐단 극복방안 강구
  -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 **③지방감사제도 독립성 강화【신규】**

감사기구 합의제화 전환 및 지방감사기관 독립성을 확보

- 독임제 감사기구를 합의제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
- 감사위원 주민직선제 검토 또는 감사기구의 장 임용에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도입을 검토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도 등의 개선으로 단체장 등의 책임성 강화

-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또는 자의적인 행정운영에 대해 정치적 책임 외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
- 감사위원 주민직선제, 지방정무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및 주민소송제도 개선 추진

3.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1.13)과 더불어 새 정부가 시작된 해

- 전부개정의 입법취지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그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중앙부처인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를 살리면서 시행내용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의 정책입안 및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

-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내용을 좀 더 강화하거나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가령 지방의회의 조직, 인사 자율권 확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음

• 자율과 책임의 등가원칙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

- 지방의회에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이를 통한 의회에 대한 견제 강화는 지방 자치법 전부개정 취지를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행안부 담당 국정과제와의 조화 필요

- 디지털플랫폼 지방의회, 지방의회와 주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임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_ 김건위 지방의정연구센터장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73 | Fax. 033-249-5274
Copyright(c)2022 강원도의회 All rights reserved.

알기쉬운 정책용어

딱 풀 이 딱 딱 한 정 책 용 어 풀 이

청년마을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일거리 등 지원

청년마을에서 새로운 삶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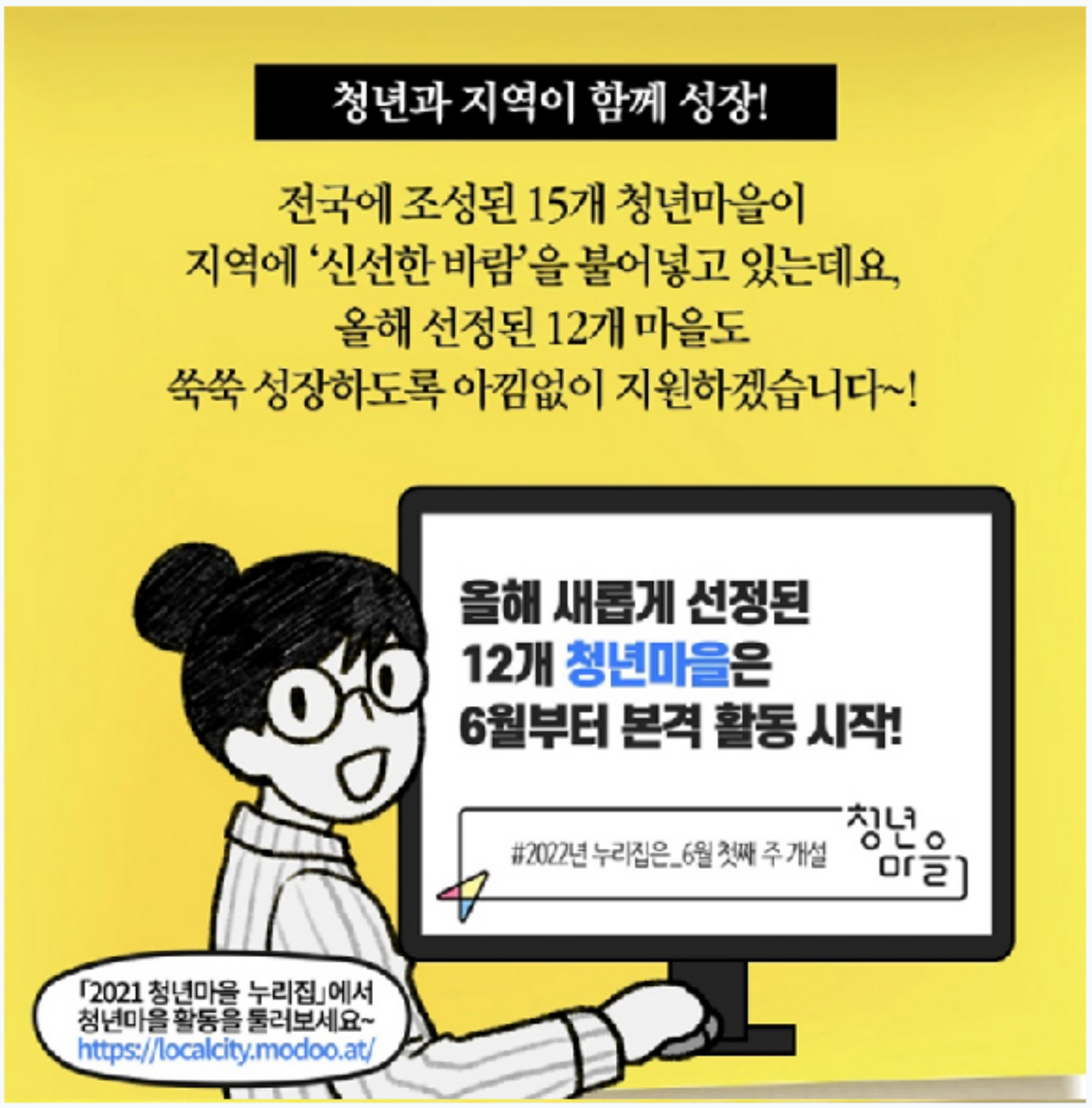
청년들이 지역 마을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활동 공간, 지역체험 등을 지원해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 단체·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택·사무실 활용하고

농사 교육도 받고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